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5월 2일까지… 종합안내 포털 개통

국세청이 12월 결산인 공익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를 통해 공시할 것을 28일 안내했다.

총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 안내 및 신고·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달 4일부터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 세금체납 열람 가능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내달 3일부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차인은 그간 임대인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는 했지만, 임대차 계약 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그나마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임대차 건물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에서만 열람을 허용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

물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세금이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사실을 확인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임대인 미납국세현황을 열람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열람 신청하면 된다.

한남노 피해 기업들 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

국세청이 지난해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동남부 해안을 덮쳐 적잖은 피해를 입힌 태풍 한남노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3월 법인세 납부에도 적용키로 전격 결정했다.

가장 큰 피해를 직접 입은 포항경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두 도시 이외의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신청을 하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27일 "오는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 중 신고일 현재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경주 소재 8000여 중소기업이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이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국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데, 이 분납할 세액도 8월말까지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중소기업 등이 오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들 중소기업의 경우 원래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7월3일까지 분납해야 하지만, 이번 직권 연장 조치로 10월4일까지 분납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등에 열거된 기준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과 기업집단 등 연결납세방식 적용하는 법인은 원래 법인세 신고납부를 3월말이 아닌 5월2일까지 하면 된다.